

공 개



의안번호	제 208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7. 20. (제 14 차)	

신한신용정보(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2. 7. 20.

1. 의결주문

신한신용정보(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한카드(주)가 신한신용정보(주)의 대주주가 되고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승인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신한카드(주)가 신한신용정보(주)의 대주주가 되고자 제출한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법령상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를 승인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참조

나. 관계부서 협의 : 해당사항 없음

다. 2022년 제14차 안전검토 소위원회 심의필(2022.7.14.)

(별지)

신한신용정보(주)의 대주주 변경승인

신한카드(주)의 신한신용정보(주)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 다 음 —

1. 승인내용

- 신한카드(주)가 신한신용정보(주)의 주식 600,000주(100%)를 취득하여 신한신용정보(주)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함

2. 승인조건

- 해당사항 없음

3. 승인일 : 2022. 7. 20.

【별첨】

관계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률

③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의 요건을 말한다.

[별표 1의2] 대주주의 요건(제6조제4항 및 제9조제3항 관련)

요 건	구 분
1. 대주주가 제9조제7항제2호 나목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	<p>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u>채무건전성</u>에 관한 기준으로서 <u>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u></p> <p>나.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7항제2호다목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거나, 그 사실이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1)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p>라. 자본금 납입자금은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을 초과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순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출처가 명확할 것(제4조에 따른 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p>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 표 제1호다목 또는 제5호다목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 주주인 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업이거나 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위 표 제6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다.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2. (생 략)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 ② (생 략)

③ 영 제9조제3항·제12항에 따른 변경승인대상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2의2] 대주주의 요건(제7조 및 제11조제3항 관련)

요 건	구 분
1. 대주주가 영 제9조제7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영 별표1의2 제1호 관련)	<p>가.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p> <p>(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적기시정조치</u>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u>상회</u>할 것</p> <p>(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3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7항제2호다목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제1항에 따른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p> <p>다.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u>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u>한다.</p> <p>(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률,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p>

	<p>(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 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p> <p>(3) 다음과 같이 <u>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u></p> <p>(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u>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u></p> <p>(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p>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①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 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 데이터 정책 과	금융 데이터 실
연 락 처	02-2100-2625	02-3145-7157